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	택	과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소진혁 의원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소진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1. 18.

발 의 자 : 소진혁 의원(1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  
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8인)

### 1. 제안이유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  
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확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주거복지사업(안 제7조)

라.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마.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3. 조 례 안: 붙임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시행령」

나. 부서검토: 주택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붙임)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대상자”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거약자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  
자

아.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 보조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5.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홍보 사업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
9. 그 밖에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내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 (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퍼센트 이하

3. 가구원 수가 1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주택과

조 례 명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div><div>□ 검토 사항</div><div><div>○ 근거 법령</div><div>▪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시행령」</div></div><div><div>□ 주요 사항</div><div><div>○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div><div>○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div><div>○ 주거복지사업(안 제7조)</div><div>○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div><div>○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div></div><div><div>□ 검토 결과</div><div><div>○ 본 제정 조례안은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주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div></div><div><div>□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div><div><div>○ 기대효과 :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 추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div><div>○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div><div>○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div></div></div></div></div></div>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7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거비보조 및 집수리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제6호에서 제8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홍보, 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2024년 법제업무편람
  - 기존에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7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거비 보조 및 집수리 사업 지원은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기발생하고 있는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3조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4. 작성자

- 주택과 주거지원팀 이행숙(☎480-2872)